

전쟁 기억의 공간화와 구조의 분화:^{*} 전쟁박물관을 중심으로

정 호 기^{**}

한국에는 전쟁을 주제로 하는 많은 기념물과 공간이 있다. 이 글은 전쟁, 특히 한국 전쟁에 관한 사회적 기억의 공간화 주제들과 그 분화 그리고 건립 구조의 특성을 전쟁 박물관들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전쟁박물관은 공식적 전쟁 기억을 공간화 했던 주제들의 형성과 변화를 잘 보여준다. 이 글은 먼저 전쟁박물관의 정의와 의미를 정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건립 주제들의 형성과 분화를 성찰한다. 전쟁박물관 건립의 특성과 변화는 주제, 장소성 그리고 재현과 담론을 쟁점으로 분석한다.

전쟁박물관은 1962년에 처음 등장했다. 전쟁박물관의 건립 주체는 군사정부와 민간정부에서 차이보다 연속된 점이 많았다. 주제는 전사자 숭배, 각 군의 역사, 전적지, 참전, 전쟁 영웅, 베트남전쟁 등으로 확장되고 다양화되었다. 이는 군사정부 시대에 정립되었고, 민간정부에서 다소 변화했으나, 대체로 관찰되었다. 여기에는 통치체제의 특성이 중요했는데, 전쟁 기념의 주기성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박물관 건립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경과하면서 감소했다. 주체는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에서 간접 지원 혹은 후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간정부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군 관련 단체, 지방정부 등이 건립 주체가 되었다. 건립 장소는 주제 및 주체의 특성을 반영했다. 전쟁박물관은 전시를 통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전시 공간은 주로 군사적 재현과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평화박물관 건립이 갖는 문제의식과 재편 방안의 수용이 요구된다.

주제어: 한국전쟁, 전쟁박물관, 공간화, 전쟁 기억, 사회적 기억

* 이 논문은 2011년 5월 23~26일 영월연세포럼에서 발표된 글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예리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들과 발표 기회를 주신 조성윤 교수님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1. 머리말

개인의 기억과 공식화된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이 동일성과 연속성을 견지할 수 있다면, 기억과 기념은 중요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체험 세대의 감소와 사회적 기억의 쇠퇴는 순리이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과거에 관한 정형화된 기억과 의식은 균열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오랜 기간 공고화되었던 공식 담론의 위상은 낮아지고, 권위를 상실한다. 시간의 흐름과 인구 구성의 변화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전승의 필요와 실천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들이다. 이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사회적 기억의 형성·유지·확산 등에 관한 문제의식의 형성과 전승을 사회의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가 여부,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할 정치·사회적 환경 조성 등이 중요하다(Assmann 2003, 58-59).

한국현대사에서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한국전쟁(the Korean War)이다. 전쟁 체험자들의 인구 구성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전쟁 효과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행위들은 해마다 관례처럼 이루어져왔다. 그렇지만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은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기념’의 관점에서 전쟁을 인식하고 전승하는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출범했던 것이 한국전쟁 40주년이 임박했던 무렵이었고,¹⁾ 한국전쟁의 기념을 위한 대규모 사업과 행사들을 주관할 단체가 50주년을 대비하여 결성되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한국전쟁은 물리적 시간관념과 정신적·심리적 시간관념의 간극이

1) 1989년 2월 3일에 ‘전쟁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이 단체가 밝힌 가장 중요한 창립 이유는 ‘6·25참전세대가 차차 사라져가는’ 것을 예비하기 위함이었다(‘6·25교훈 통한 통일 기억 기대’, 『동아일보』, 1989. 2. 4).

크다. 정신적·심리적 시간관념이 현재와 근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의 현재화와 미래화를 위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이 계속해서 개발·적용·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인철 2000). 역사적 사건의 전승과 계승은 세대 간의 면대면 또는 집단적 접촉과 서사라는 방법보다 다양한 매체와 더불어 전달 및 교육 매체들이 결합된 장소와 공간에서 훨씬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²⁾

과거에 대한 기억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재현 수단과 공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진진성 2005, 95). 매체의 개발이 수단과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전달할 내용의 선택과 구조화는 담론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국가의 예산으로 조성된 전쟁의 재현 공간과 담론은 국가의 기억(state-memory)이 양과 질 모두에서 압도한다. 여기에는 의례와 행사 등과 같은 집합적 행위들이 다양한 형태와 수준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를테면 한국전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준)국가의례만 4개이다.³⁾ 의례들은 국가의 기억으로 유지해온 서사와 지배 담론으로 수렴 또는 흡수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크게 일조한다(Booth 2006, 44-51).

한국전쟁의 기원과 배경 그리고 전개 등에 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졌다(이완범 2005). 연구들은 전쟁 기억과 기념이 공간화 되는 자원들로 활용되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이 활발하며, 주류를 이룬다. 대비적으로, 전쟁 기억과 기념에 관한 연구들은 1990년을 전후하여 등장했는데, 전적기념물의 실태와 관리 그리고 용산의 전쟁기념관 건립 등을 다루었다.⁴⁾ 이 주제의 연구들은 한국전쟁 50주

2) 노라(P. Nora)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 기념비와 휴전일 기념행사들을 연구하면서 ‘교육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공화국은 죽은 공화국, 즉 사람들이 공화국을 위해 더 이상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한다(Nora et al 2010, 227).

3) 현충일(6. 6), 6·25전쟁 기념일(6. 25), 서울수복기념일(9. 28), 국군의 날(10. 1) 등이 있다.

년을 전후하여 활성화되었는바, 군사학 전공자들이 주로 발표했다.⁵⁾ 그런데 이전과 다른 시각과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연구들도 등장했다. 비 군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전쟁기념물이 건립된 정치·사회적 배경과 맥락, 담론, 문화, 예술 등을 중시했다. 당연시되었거나, 문제시되지 않던 지점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⁶⁾ 전쟁 기억과 기념에 관한 연구 주제들은 더욱 확장되어 2000년대 말에는 전쟁 당사국들을 비롯하여 이를 둘러싼 국가들과 집단들이 다양한 이해와 인식의 차이를 갖고 대립하고 있음이 고찰되었다(김정현 2009; 박경석 2009; 여문환 2009; 정근식 2010). 전쟁 당사국들은 자신의 관점을 설파하고, 행동을 정당화하며, 대내외적 수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쟁시설의 건립 혹은 재구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량의 정보를 일시에 제공하기 위해 ‘○○관’ 등으로 명명되는 전쟁시설들의 건립이 선호되었다. 이 시설들은 전쟁에 관한 현재적 담론과 관련 국가들의 관점, 그리고 이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들의 산물이다. 이를테면, 한국의 전쟁기념관을 필두로 한 수많은 전쟁 시설들과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참전기념관 그리고 미국립공군박물관 내 한국전쟁관 등은 북한의 조국해방전쟁전승기념관, 중국군사박물관 내 항미원조전쟁관 등과 상충 또는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이 비, 탑, 조형물 등과 같은 전쟁기념물과 널리 알려진 일부 대규모 기념공간들에 집중해서 고찰했다면,⁷⁾ 이 글의 시·공간적 연구 범위와 대상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이다. 이 글은 전쟁박물관

4) 김행복(1989), 이승환(1990), 국방군사연구소 편(1992), 이원혁(1994), 이은봉(1994; 1995) 등이다.

5) 박영현(2001), 민현구(2002), 김용남(2003; 2005) 등이다.

6) 박찬경(1998), 김미정(2002), 김형곤(2005; 2007), 정호기(2008) 등이 있다.

7) 김숙향(2001), 김형곤(2007), 정호기(2007; 2009), 한홍구(2008; 2010), 김미정(2010), 안경화(2010), 이상석(2010a; 2010b), 조은정(2010), 윤충로(2010)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소개, 답사, 관람 등에 관한 글이 다수 있다.

(war museum)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쟁에 관한 사회적 기억의 공간화 주제들과 분화 그리고 건립 구조의 특성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전쟁박물관은 전쟁을 주제로 건립된 공간들 가운데 가시성과 서사성이 탁월하며, 교육 및 학습 효과가 가장 크다. 이 글은 전쟁박물관의 형성과 변천을 통해 전쟁 기억의 공간화가 어떻게 형성 및 변화했으며, 이 과정의 구조와 특성을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전쟁박물관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전쟁박물관 건립 주제들의 형성과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 이는 정치체제의 변동과 10년을 주기로 이루어진 기념행위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전쟁박물관 건립 구조의 변화와 지속은 주제, 장소성, 재현과 담론을 쟁점으로 분석한다.

2. 전쟁박물관의 정의와 연구 대상

한국은 1908년에 설치된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근대 박물관의 기원으로 삼는다. 정부수립 이후인 1949년에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민족박물관이 개관했다. 그렇지만 1984년 12월 31일에 박물관에 관한 첫 법률인 “박물관법(제3775호)”이 제정되었다(한국박물관100년사편찬위원회 2009a, 11-17). 이 법은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410호)”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박물관법은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일반 공중의 사회교육’이라고 하고, 기능을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로 정의했다. 이는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걸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수용되었다. 두 법률의 차이는 자료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목적이 ‘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으로 일부 바뀐 것이었다. 박물관의 정의는 1999년 2월 8일의 법률 개정으로 ‘관리’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일반 공중의 문화

교육'은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2009년 3월 5일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기능이 추가되었고,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증진'으로 문구가 약간 바뀌었다. 이처럼 박물관의 개념과 정의는 점점 확장·확대되었으며, 목적도 조금씩 달라져왔다.⁸⁾

전쟁의 기억과 재현 공간들은 기념관, 박물관, 역사관, 유물관, 전시관 등으로 불린다.⁹⁾ 여기에는 문서, 무기, 장비, 의복, 노획물, 실태에 관한 기록 등이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전시와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이 유물과 유품의 보존, 관리 및 전시 그리고 조사와 연구에 역점을 두었다면, 기념관은 전시와 교육에 보다 강조점을 둔다.¹⁰⁾ 전시는 박물관과 기념관 등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독립된 공간과 기능을 갖춘 시설들도 있으나, 다른 목적 혹은 복합 공간의 부속 시설로 운영되기도 한다. 각 시설들은 어떻게 명명되는가에 따라 지향점이 다르고, 목적과 배경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그 차이는 모호하고, 구분할 실효성도 낮다(Buruma 2002, 287-288). 위의 시설들이 계획 및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명칭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쟁박물관과 유사한 용어로 '군사박물관(military museum)'이 있다. 군사박물관은 전쟁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포괄하며, '전쟁과 군사와 관련된 모든 사물 중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군사재(軍事

8) 박물관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그리고 변화는 서원주의 연구(2007)를 참조하기 바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의하는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한국박물관협회는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전쟁 및 군사를 단일 주제로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와 해외파병사, 국군발전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박물관”으로 소개했다(한국박물관협회 엮음 2008, 12).

10) 박물관이 ‘역사적 유물을 모아놓고 이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재 해석하는 열린 공간이라면, 기념관은 종교적 의례의 경건함이 요구되는 닫힌 공간이’라고 구분되기도 한다(한홍구 2008, 439).

財)를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민현구 2002, 6). 그렇지만 군사박물관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용례가 드물다.¹¹⁾ 군사박물관이 포괄하는 범위와 대상이 넓을지라도, 무기와 전쟁 물자 그리고 흔적과 기념물이 주요 구성물이다.

박물관은 비정치적이며 객관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박물관은 설립, 운영, 수집, 전시,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정치적 행위의 연속이다. 박물관은 특정 집단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역사성 그리고 통치 기반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정치성'과 '권력성'의 관점에서 박물관을 성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金子 淳 2001, 16). 이는 박물관은 과거에 대한 조작성과 지배 헤게모니의 관철 그리고 선택적 강조 등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맥락화됨을 의미한다(전경수 2005). 전쟁박물관은 어떤 주제의 박물관보다 정치성이 깊숙이 배태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박물관을 정치체제의 특성 및 지향과 관련지어 분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박물관을 엄격히 정의하면, 기준에 미달한 사례들이 많고, 집단묘지들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박물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전쟁에 관한 '전시'와 '광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구 대상은 증가한다. 이 글에서 전쟁박물관은 전쟁에 관한 자료 보존, 수집, 전시, 관리, 연구, 교육 등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간과 시설 모두를 포괄한다.¹²⁾ 단, 이 글은 해방 이후 발생한 전쟁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전쟁박

11) 해외 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군사박물관, 프랑스 파리의 군사박물관, 독일 드레스덴의 군사박물관 등이 있고, 국내에는 백제군사박물관이 있다. 전쟁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차이는 Sherman(1995, 53)를 참조.

12) 기미즈카 요시히코(君塚仁彦)는 '전쟁박물관'을 "전쟁 그것 자체를 전시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으로 정의한다(2006, 215).

물관은 목적과 기능에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글은 전쟁 유적과 유물을 활용하여 또는 재구성하여 전시와 교육을 수행하는 시설들로 넓게 파악했다.

〈표〉 전쟁박물관의 건립 시기와 연구 대상

정부	개관한 전쟁박물관	계
박정희	국군묘지 내 전쟁기념관(서울 동작동), 군사박물관(육군사관학교), 해사박물관(해군사관학교), 종합안보전시장, 왜관지구전적기념관,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공군사관학교 기념관, 낙동강승전기념관, 지리산지구전적기념관	9
전두환	다부동전적기념관, 통일전망대(통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대전국군묘지	4
노태우	철의3각전적기념관, 백마고지전적기념관, 김재옥여교사기념관, 국군묘지 내 기념관과 호국관, 파라호안보전시관, 학도병기념관	6
김영삼	전쟁기념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2
김대중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양구전쟁기념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국립영천호국원, 지리산빨치산도벌전시관, 통일안보전시관, 국립임실호국원, 학도병의용군전승기념관	8
노무현	강우재전승기념관, 박진전쟁기념관, 유치곤장군호국기념관, 에티오피아한국전 참전기념관	4
이명박	베트남참전용사만남의장, 국립이천호국원, 부산UN평화기념관(건립 중), 영천호국기념관(승인)	2

연구 대상은 “6·25전쟁 60주년사업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내현충 시설물’에서 기념관으로 분류한 사례들,¹³⁾ 전시관 등을 갖춘 국립묘지, 전적기념관, 전쟁 현장들에 세워진 주요 전시관과 기념관들을 포함했다. 그러나 교육관 기능이 주되거나, 무기와 전쟁 유물의 단순 전시 공간들은 제외했다.¹⁴⁾ 그 결과 한국의 전쟁박물관은 35개로 집계되

13) “6·25전쟁 60주년 사업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정보에 의거해 밝힌 한국전쟁 관련 기념관은 13개이다.

14) 전쟁박물관은 한국전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한 사례만 베트남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양한 주제를 포괄한 전쟁박물관도 핵심은 한국전쟁이었다. 반공회관도 실내 및 실외 전시실을 갖추었고, 유물 전시와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사실상 소규모 전쟁박물관으로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있는데, 건립 또는 개관한 시점을 기준하여 각 정부별로 분류하면, <표>와 같다.¹⁵⁾ 전쟁박물관은 신축하여 재개관하기도 했는데, 처음 건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3. 시대별 건립 주제의 변화와 맥락¹⁶⁾

1) 군사정부 시대: 전사자, 군의 역사, 전적지

전쟁박물관이 처음 건립된 곳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전신이었던 국군묘지였다. 국군묘지 내 ‘전쟁기념관’은 ‘국가가 외적의 침범을 받았을 때 적과 싸우다가 전사할 당시 전사자가 가지고 있던 유품(유언장, 사진 또는 기타 유품)을 보관’하기 위해 건립되었는데,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962년 제43회 3·1절에 개관한 전쟁기념관은 100평 규모의 단층 벽돌 건물이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협소하고 전시 위주의 공간이었으나,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전군의 참모총장 등 군 최고 지휘부들이 개관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의미가 컸다.¹⁷⁾ 국군묘지는 유족과 정치인 그리고 학생과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전쟁기념관이 건립될 때까지 별다른 시설들이 들어서

15) 전쟁기념관은 해체되었으나, 최초 시설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새로 건립된 두 전시관들(기념관, 호국관)은 하나로 간주했다.

16) 이 글은 군사정부와 민간정부로 시대를 구분했다. 군사정부 시대는 그 방법이 합법적이던 불법적이던 군 출신이 정부를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군사정부는 두 번에 걸친 쿠데타가 집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군부와 신군부라는 차이를 두고 살펴보기도 했다. 민간정부 시대는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17) ‘전쟁기념관 개관’, 『경향신문』 1962. 3. 1.(석간 3면) 개관식은 8시 15분에 있었다. 개관식이 마무리될 시점에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국군묘지를 참배하고 있었다. 참배를 마친 정부 각료들과 군 장성들은 10시에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진 않아서 주시를 받기에 충분했다.

박물관으로 명명된 전쟁 기념공간들이 건립된 것은 몇 년 후였다. 군(軍)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사관학교들이 그 장소였다. 사관학교는 특수한 목적과 목표 아래 설립·운영되는 대학임을 반영한 전쟁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전쟁박물관이 사관학교에 건립된 시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자료실, 기념관, 박물관 등 여러 가지 명칭과 성격을 지녔고, 명칭의 변화 및 공간의 분화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박물관을 집대성한 책에서는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의 순서로 박물관을 개관한 것으로 기록했다(한국박물관100년사편찬위원회 2009b, 809-811).

사관학교 박물관들의 기원이 되는 시설이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순서가 타당하다. 그렇지만 박물관의 외형과 기능을 어느 정도 충족한 시설이 건립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고려하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육군박물관은 1957년 6월 12일에 개관한 육군사관학교 ‘기념관’에 기원을 둔다(육군사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 1978, 227). 기념관은 1966년 10월 4일에 ‘군사박물관’으로 개칭되었고, 이후에도 명칭과 성격이 몇 차례 더 바뀌었다. 육군박물관이라는 명칭은 1983년부터 사용되었는데,¹⁸⁾ 개관 시기나 구성면에서 전쟁박물관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¹⁹⁾ 육군박물관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상태로 출발했지만 변화가 많았다. 현 기구 편제에서는 “육군박물관” 부설로 ‘기념관’이 있다. 육군박물관은 “우

18) 군사박물관은 이전과 더불어 시설의 추가 및 신축 등을 하면서 1983년 3월 28일에 육군박물관으로 개칭했다. 현 시설은 1985년 5월 1일에 개관했고, 1996년 5월 1일 육사교훈답 1층에 육사기념관이 개관했다.

19) 『육군사관학교 30년사』는 이 박물관을 “우리나라 유일의 군사박물관”이며,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관한 자료가 소장품과 전시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기록했다(육군사관학교30년사편찬위원회 1978, 227).

리나라의 각종 군사유적과 유물을 조사 정리하고, 수집 보관 전시함으로써 전통 국방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이해 및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건립 목적으로 한다(육군사관학교60년사편찬위원회 2006, 144).

전쟁에 관한 자료를 가장 먼저 수집하고 전시했던 곳은 해군사관학교였다. 1946년 1월 17일에 이순신에 관한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개관한 전시 공간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의 기원으로 본다(한국박물관100년사편찬위원회 2009b, 850-851). 해군사관학교는 이순신의 삶과 유물 그리고 유산의 발굴·정리에 사명감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왔다. ‘박물관도서관’이라는 직제가 설치된 것은 1957년 3월 이었고(해군사관학교 1981, 244), 4월 11일에는 11기 졸업식을 기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정초식을 거행했다. 박물관은 전시실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1976년 1월 17일 개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임시건물에 정식 개관했다(해군사관학교 1996, 290).²⁰⁾ 이 박물관이 일정한 수준의 외형과 내용을 갖춘 것은 1981년 3월 23일이었고, 현 박물관은 1990년 4월 28일 이순신 탄신일을 맞이해 재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이 박물관의 소장품과 전시품은 이순신에 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방 이후 해군과 해병의 영웅들에 관한 기념물과 역사 자료들도 많지만, 한국전쟁에 관한 소장품과 전시품은 상대적으로 적다.

공군사관학교는 1979년 3월에 ‘기념관’을 개관했으나, 1985년에 충청북도 청원군으로 이전하면서 ‘공군박물관’으로 개칭했다(공군사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1999, 33). 이 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 건물과 야외전시장으로 구성되었다. 1층에는 공군태동기관, 6·25 전쟁관, 대간첩 및 해외 참전관을 두었고, 2층은 공군사관학교 전시관이 중심을 이루는데, 세계 항공기 발달사와 조선시대 비차 등이 전시

20) 김용남의 연구(2003, 306)도 해군박물관의 설립을 1976년으로 적시하고 있다.

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의 기억과 기념은 비·탑·조형물 등에서 유물과 자료의 수집 및 보관과 전시 그리고 교육에 역점을 둔 공간의 건립으로 확장되어 갔다. 군 교육 기관들이 이를 선행했다. 이 전쟁박물관들은 군용 시설의 일부라는 이유로 시민의 관람은 제한되었고, 군인들의 정신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시민의 관람은 1990년대 말부터 자유로워졌으나, 보안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²¹⁾

일상생활공간에 전쟁박물관이 처음 조성된 것은 유신체제 말기였다. “유엔한국참전국협회”의 주관으로 1978년 4월 여의도에 개관한 ‘종합안보전시장’이 그것이다. 종합안보전시장은 국방부와 한국전쟁 참전국들이 기증한 전쟁 장비들과 전쟁기념물들을 전시한 실외 공간으로, 오늘날에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전시장은 용산의 전쟁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진로를 잃고 방황하다 1995년에 해체되었고(김승기 1995), 전시품의 일부는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항공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종합안보전시장 이후에는 전쟁박물관 개관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전적지 개발사업’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전적기념관들은 1976년 12월 14일에 제정된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8308호)”에 의거해 건립되었다. 전적지는 ‘6·25전쟁 당시의 국군 및 유엔군의 전적지’를 지칭했다.²²⁾ 이 사업은 전적비와 전적기념관 건립이 주된 것이었다. 전적비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21) 육군박물관이 시민에게 개방된 것은 1997년이였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국방일보』, 2006. 3. 30.

22) 이 법률은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유로 1983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1304호에 의거해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유사 사업들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은 1990년 2월 20일에 관리 지침을 다시 마련했다(김용남 2005, 86-87). 2000년경의 조사에 의하면, 참전국 기념비를 제외한 ‘한국전쟁 관련 전적기념물’은 41개였다(육군본부 2000, 215).

15개 장소에 세워졌다. 이 장소들 가운데 보다 의미가 깊은 5곳에 전적기념관이 함께 들어섰다. 전적기념관은 1978년에 2개, 1979년에 2개, 그리고 1981년에 1개가 각각 건립되었다.²³⁾ 전적기념관들은 관련 전투가 전개되었던 시일에 또는 6월 25일을 전후해 개관했다. 전적기념관들은 다음 정부들에서의 전쟁박물관 건립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유사한 형태로 건립되었던 전쟁박물관들의 모델이 되었다.

전적기념관들은 국가가 전쟁 기억과 기념을 다른 시각으로 파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는 “국가안보와 반공에 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적지의 효율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전적지개발추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국가안보와 반공이라는 관점은 ‘낙동강승전기념관’의 별칭이 ‘승공관’이라는 점에서 잘 확인된다. 주목할 점은 전적지 개발을 ‘관광자원’으로 파악했으며, 전투 현장을 ‘문화상품’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볼거리가 필요했다. 비, 탑, 조형물 등은 관광 상품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았고, 국민의식을 제고하는데 제약이 컸다. 더욱이 전적지들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위치해서 관람객의 유인 요소가 충분하지 않았다. 전적기념관은 이러한 과제들을 충족시킬 최적의 방법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12·12쿠데타로 군부가 재집권하면서 ‘신군부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박물관 건립 주제와 성격은 계승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전쟁박물관 건립을 마무리하거나, 유사

23) 이때에 건립된 전적기념관들 가운데 ‘지리산지구전적기념관’(1979. 11)은 재건축되었다. 교통부의 지시를 받아 국제관광공사가 231백만 원으로 건립한 기념관의 전체 면적은 6,989평이었고, 140평의 전시공간에 2개 전시실을 갖춘 2층 건물이었다(『매일경제』, 1979. 11. 23). 2001년에 해체된 이 기념관은 2007년 5월 31일에 ‘뱀사골 탐방안내소’를 신축해 개관했다. 2개의 전시관 가운데 ‘아! 지리산이야’라는 제목의 제2전시관이 전적기념관을 대체했다.

한 전쟁박물관을 착공하는데 주안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수적으로는 감소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두환 정부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전쟁박물관 건립에는 관심이 낮았다. 둘째, 한국전쟁에 관한 기념사업이 10년을 주기로 고양되고 있는데, 노태우 정부가 이 시기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중반기였던 1990년과 1991년 초에 전쟁기념관이 대거 건립되었다. 노태우 정부에서의 전쟁박물관은 전적지가 중요 주제였으나, 영웅과 학도병 등에 관한 것도 건립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전쟁박물관 건립에 관심이 컸다. 첫째, 국립묘지 내의 전쟁기념관을 확장 및 개편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결정되어 전두환 정부 초에 현충관이 완공(1980. 12.)된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던 국립묘지에 ‘기념관’과 ‘호국관’을 건립했다. 이 공간들은 한국전쟁 40주년이 되던 1990년에 개관했는데, 이로서 국립묘지의 전쟁기념관이 3개의 공간들로 분할된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둘째, ‘군사박물관’으로 명명되었던 전쟁기념관 건립을 착수했다.²⁴⁾ 전쟁기념관도 한국전쟁 40주년이 되던 해의 ‘서울수복 기념일(9. 28.)’에 기공했고, 1994년 6월에 개관했다. 전쟁기념관의 발상과 근간은 한국전쟁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 기념관은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던 전쟁과 해방 이후 한국인이 참전한 전쟁 모두를 포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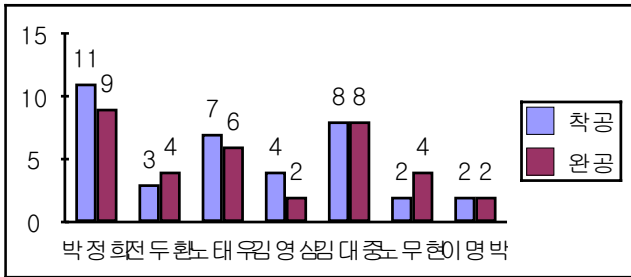
2) 민간정부 시대: 착시와 주제의 다양화

김영삼 정부는 신군부의 일원과 협력하여 집권했으나, 문민정부라

24) 전쟁기념관 건립 계획이 추진되었던 기원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수 차례 시도되었다가 좌절되었는데, 사업이 구체화되었던 초기에는 ‘군사박물관’으로 명명했다. 전쟁기념관은 1953년 8월 17일 북한에서 개관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대척점을 형성하고자 했다(전쟁기념사업회 1997).

고 자칭했다. 문민정부는 군사정부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사업들을 많이 벌였다. 거창사건을 통해 전쟁 관련 과거청산에 새로운 발판을 놓았던 것도 그 하나였다. 그렇지만 전쟁 기억과 기념은 단절하기 어려웠다. 군사정부와 거리두기를 했던 김영삼 정부에게 전쟁박물관 건립은 상충된 이미지였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전쟁기념관 건립을 중단하거나, 중앙박물관으로 용도 전환을 모색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터이지만, 군부와 군 관련 단체들을 통제할 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했다. 그리하여 무성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1994년 6월 10일 전쟁기념관이 개관되었다.

〈그림1〉 정부별 전쟁박물관 건립 동향



<그림1>은 김영삼 정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사에서 중요한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전쟁박물관은 박정희 정부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 다음으로 많이 건립되었으나, 김영삼 정부에서는 급감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쟁박물관 건립이 급증했다. 완공을 기준으로 하면,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전쟁박물관 건립 동향은 ‘W’ 모양을 이룬다. 동북아의 평화 증진과 고착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

쟁박물관이 왜 이렇게 많이 건립되었는가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는 다음 몇 가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김영삼 정부에서 전쟁박물관이 완공된 사례는 확연히 적다. 그렇지만 전쟁박물관이 착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김영삼 정부가 무심했다고 할 수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 착공된 전쟁박물관은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국립영천호국원, 통일안보전시관, 국립임실호국원으로 확인된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새로운 성격의 국립묘지, 이른바 “호국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추진되었다.²⁵⁾ 군대가 존재한다면, 집단묘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계획은 “재향군인회”가 추동했으나, 사실상 국가보훈처 사업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오랫동안 호국원 조성을 추진했는데, 1994년 5월 30일에 ‘향군 참전 군인묘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호국원 조성은 여러 지역들로 분할 추진되었고, 단일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국비 투입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전쟁박물관 건립이 ‘안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통일안보전시관은 간첩 침투 사건에서 획득한 잠수함을 활용한 것이어서 남달랐다. 김영삼 정부에서 계획 수립 및 착공했던 전쟁박물관은 다음 정부들에서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에서 전쟁박물관 건립이 적었던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주요 이유였다. 정부 예산이 편성되려면, 1~2년 전에 계획이 확정되고,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 초반에 착공되었던 사업들은 사실상 김영삼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25) 1997년 4월 14일에 첫 번째 호국원이 착공되었다. 호국원은 규모와 안장 대상자에 서만 차이가 있을 뿐, 현충원과 거의 동일한 요소, 시설, 외형으로 구성되었다. 호국원은 집단묘지이지만, 각종 전쟁 물자의 전시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쟁박물관의 기능을 갖추었다. 호국원은 전쟁에 대한 국가적 기억이 ‘전사’에서 ‘참전’까지 포괄하여 다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호국원은 경북 영천, 전북 순창, 경기 이천 등에 건립되었다.

둘째, 위의 점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김대중 정부에서 착공된 전쟁 박물관의 사례가 많은데, 이는 한국전쟁 50주년이 되는 2000년이 김대중 정부 중반에 해당되었던 것과 관련이 깊다.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은 IMF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되었다.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다수의 전쟁박물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양구전쟁기념관, 학도병의용군전승기념관, 강우재전승기념관 등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강우재전승기념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완공되지 못했으나, 나머지는 모두 완공·개관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면, 전쟁박물관 건립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국가가 목적의식을 갖고 전쟁박물관을 건립했다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정부에서 완공되었던 전쟁박물관들은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이거나 연속선상에 있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기념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 및 준공되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해외 참전국을 주제로 했던 유일한 전쟁박물관이다. 전쟁박물관 건립의 감소세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관한 전쟁박물관들도 지난 정부에서 착수되었던 사업들의 마무리였다. 국립이천호국원을 조성한 배경은 김영삼 정부에 있었고, 베트남참전용사만남의장은 1998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심의 전쟁박물관 건립은 베트남전쟁 등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시설은 완공되기까지 10여 년이 소요되었다. IMF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시대 담론이 변화했다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전쟁 박물관을 건립할 주제와 대상이 감소했으며, 이를 추진할 주체 형성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착공한 사례는 부산UN평화기념관, 영천호국기념관이다.²⁶⁾ 기념관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건립 주

26)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국전쟁 60주년과 관련해 전쟁박물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UN평화기념관은 전쟁기념사업회가, 영천호국기념관은 영천시가 건립을 주관하

제는 유엔의 한국전쟁참전과 전적지이다.

4. 건립 구조의 변화와 지속

1) 건립 주체

전쟁박물관은 50여 년 동안 건립되어왔다. 전쟁박물관은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을 반영하는 공간들이어서 비공식적 전쟁 기억을 담아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하거나, 중요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가였다. 그런데 건립을 주관한 정부 기구들이 동일하거나 일관되지 않았다.

전적지 개발 사업 이전에 건립된 전쟁박물관들은 국방부가 주관했다. 국군묘지나 사관학교는 국방부가 관할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전쟁박물관에 관한 구상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전쟁을 박물관으로 재현하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인식 수준도 낮았다. 전적지 개발 사업이 구체화될 무렵, 공보처의 후원을 받았으나, 민간단체가 주관한 첫 전쟁박물관이 건립되었다. 종합안보전시장은 군사정부 시기에 민간단체들이 주관하여 건립했던 몇 되지 않은 전쟁박물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례였다.

그런데 전적지 개발은 주관했던 정부 기구가 흥미롭다. 업무 유관을 고려한다면, 국방부나 건설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데, 교통부가 주관 부서였고, 국방부가 후원부서였으며, 국제관광공사가 집행부서였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국방부가 건립을 주관하기도 했으나, 이때는 사업이 일단락될 무렵이었다. 그리하여 5개의 전쟁

고 있다. 앞으로 다른 전쟁박물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박물관 가운데 4개는 교통부가, 1개는 국방부가 주관했다. 국방부는 다부동전적기념관을 건립했는데, ‘탱크’로 외형화 되어 다른 기념관들보다 군사적 재현 이미지가 뚜렷했다.

교통부가 전적기념관 건립을 주관했으나, 국방부 주관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전적기념관 건립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교통부 장관들의 면면에서 잘 확인된다. 전적지 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했던 교통부 장관은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던 최경록²⁷⁾이었다. 그리고 전쟁박물관 건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교통부 장관들이었던 민병권, 황인성, 윤자중 등도 모두 군 장성 출신자들이었다.²⁸⁾ 그러므로 교통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해도 내용상 문제가 될게 없었다. 전적기념관들은 국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나머지는 도비와 지역민의 성금 그리고 찬조금 등으로 조달되었다.²⁹⁾

중앙정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한 방식은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하는 방식이 선보였다. 1984년 9월 15일에 개관했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대표적인데, 박정희 시대 말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던

27) 최경록(崔慶祿)은 1920년 9월 21일에 출생했다. 일제하 지원병으로 입대해 일본도 요하시에비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미군정에서는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헌병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1960년 8월 장면 정부 하에서 제13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 5·16쿠데타 직후에 강제 예편된 뒤로는 반 박정희 입장을 취했다. 그러다가 1967년에 멕시코 대사에, 1973년에 교통부장관에 임명되었는데, 1977년 11월에 발생한 이리역 폭발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28) 민병권(閔丙權)은 1918년 1월 2일에 출생했고, 1992년 2월 17일에 사망했다. 1944년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에 재학 중 학병으로 징집되었다. 한국전쟁 시기에는 제21사단장이었고, 요직을 거쳐 1963년에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곧 바로 민주공화당 당무위원에 임명되었고, 제6~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박정희의 신임이 두터웠다. 그는 1977년 11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제23대 교통부장관을 역임했다. 그 외 제24대 교통부장관인 황인성(黃寅性)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소장으로 예편했으며, 제28대 교통부장관이었던 윤자중(尹子重)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공군참모총장으로 예편했다.

29) 이를테면, 춘천지구전적기념관 건립에는 1년이 소요되었고, 성금·국비·도비 6억 8천만 원이 투입되었다(『매일경제』, 1978. 11. 15).

전쟁박물관과 주제, 담론, 형태 등에서 상동적이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사건 관련지역이나 관련 기관들도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이런 류의 전쟁박물관들은 인적·경제적·문화적으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소규모로 건립되었다. 군사정부 시대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정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을 직접 주관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졌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 이를 대신하여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한 것은 전쟁기념사업회였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군 출신의 전역 장성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나, 대통령이 회장을 임명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격상 국가 기구와 다를 바 없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한국전쟁 기념사업들이 10년을 주기로 하여 대규모로 추진된다는 점을 활용해 전쟁박물관을 건립했다. 이 단체가 건립한 전쟁박물관의 주제와 내용은 박정희 시대에 건립되었던 사례들과 연속되었다.

민간정부 시대에는 지방정부가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한 사례들도 많았다. 지방정부가 주관한 사례들은 과반수에 이르렀다. 지방정부는 전쟁박물관 건립을 중앙정부에게 국비를 요구하며 지원받는 명목과 경로로 활용했다. 단체장들은 전쟁박물관 착공과 건립을 재임기의 중요한 업적으로 홍보했다. 이들은 전쟁박물관 건립의 1차 목적을 기억의 계승과 아픔의 공유 그리고 애국심 함양 등에 의한 국가관 형성이라고 밝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광 블록 조성 and 수입 증대 등과 같은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지역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쟁박물관 건립 주체의 변화는 군사정부와 문민정부 사이에 가장 뚜렷하며, 정부에 따라서도 차이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건립 주체의 변화는 전쟁박물관을 구성하는 내용과 담론을 차별화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국가의 전쟁 기억과 기념에 관한 담론을 지

속하고 균열을 봉합할 수 있다면, 주관 주체가 누구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

2) 장소성

렐프(E. Relph)가 말한 것처럼, 전투지 혹은 전쟁과 직접 관련된 장소들에 전쟁박물관을 건립한 것은 장소의 심상성(imageability)을 높여 준다(Relph 2005, 88-90). 집권 정부와 조직이 공공장소에 기념비적 방식으로 전쟁박물관을 세워 지위와 권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려는 이 데올로기는 군사정부 또는 이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박물관들의 장소 선정 및 담론과 부합한다. 전쟁박물관을 건립한 목적과 주제는 장소 또는 지역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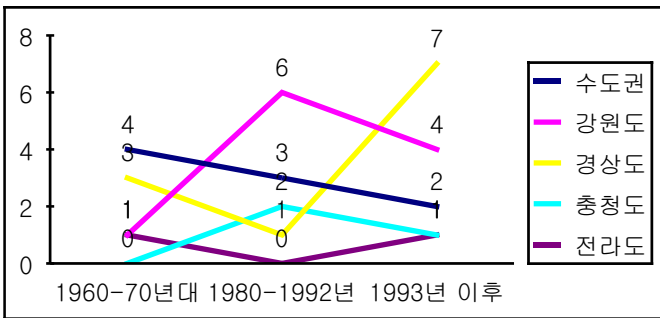
박정희 정부 전반기는 집단묘지와 군사 학교가, 후반기는 주요 격전지가 장소로 선정되었다. 전쟁박물관들은 군사적인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었거나, 교통 여건상 방문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들에 위치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따라서 전적지의 전쟁박물관은 본연의 목적이었던 한국전쟁의 기억과 기쁨을 충실이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교통 여건들은 점차 개선되었으나, 박정희 정부 이후에도 전적지의 전쟁박물관 건립이 주류를 이루어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립묘지들과 여의도에 있던 전쟁박물관들이 국가가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장소 연고성으로 보면, 군사정부와 민간정부의 차이는 미비하다. 민간정부에서도 다수의 전쟁박물관들은 전적지 혹은 전쟁 관련 지역에 건립되었다. 그렇지만 교통망의 점진적 개선과 자동차 보급 그리고 여가 문화의 확산 등으로 관람 환경이 양호해졌다. 또한 용산의 전쟁기념관,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과 같이 도시

내에 대규모 전쟁박물관이 건립되면서 국가의 전쟁 담론 확산은 더욱 긍정적 기반을 갖추어갔다.

<그림 2>는 전쟁박물관이 언제 어느 지역에 주로 건립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경상도에 전쟁박물관 건립이 집중되었다. 수도권에 건립된 사례가 많은 것은 국군묘지와 군사학교들이 서울에 위치했기 때문이고, 경상도의 사례가 많은 것은 전적기념관 4개 가운데 3개가 대구·경북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는 강원도에 압도적으로 많은 전쟁박물관이 건립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전적지 중심으로 기념관들이 건립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전적기념관 건립은 박정희 정부에서는 대구·경북에,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는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한편 충청도에서도 처음으로 전쟁박물관들이 건립되었는데, 대전국립묘지와 김재욱여교사기념관이 그 사례들이다.

〈그림 2〉 시대와 지역별 전쟁박물관 건립 양상



민간정부 시대에는 경상도와 강원도에 전쟁박물관 건립이 집중되었는데, 특히 경상도가 두드러진다. 이는 민간정부 시대에도 전적지, 전승, 참전 등이 전쟁박물관을 건립하는 주요 주제였던 것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전쟁박물관 건립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띠는 것과 지역별 정치적 성향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쟁박물관을 매개로 하는 전쟁 기억 및 기념 담론과 지역 정체성의 결합이 긴밀함을 연상시킨다.

3) 재현과 담론

대부분의 전쟁박물관들은 유물 수집과 보관 업무보다 ‘전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시공간은 변화보다는 지속 또는 고착화 경향을 띤다. 건립 주제와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목적과 지향 그리고 담론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시 공간은 실내와 실외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내 전시공간은 전쟁사와 전쟁의 특성을 중소형 무기류, 유품, 유물, 그리고 설명과 이미지 및 영상 등을 활용한 담론들로 채워져 있다. 실외 전시공간은 중·대형 무기류의 전시장이거나, 전투 재현과 다종의 상징물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쟁박물관의 재현과 담론의 구현 방식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Nora 2010, 314-315; 여문환 2009; 동북아역사재단 2008). 여기에서는 전쟁박물관 전시의 특성을 재현과 담론의 관점에서 포괄적이며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사람이 배제된 재현 공간이다. 무기 사용자와 전쟁이 양산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의 구체성 등은 선택적으로 편재되었거나, 배제되었다. 대비적으로 각종 무기류와 전쟁 물자, 지도, 사진, 그림 등이 전시와 교육의 주요 구성물들이다. 전쟁에서 사람의 관계와 죽음 그리고 생존자의 삶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접근이 아니다. 무기류와 전투 용품들은 관람객에게 감성을 분리시키고, 전쟁과 사회구성원의 관계를 단절적으로 인식시킨다. 이를테면 전시된 무기들이 얼마나 많

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는가는 기록되지 않는다. 사람의 흔적은 전투 또는 참전 사망자에 대한 이름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전쟁 영웅이나 신의 반열에 놓인 전사자들의 이름은 후손에게 숭배의 책무를 무겁게 부과하는 상징적 유산이다.

둘째, 성인들의 시선은 무기 전문가나 구매업자 또는 과학자의 시선과 일체화되곤 한다. 무기류의 전시물들은 남성들의 군 생활을 회고하게 하고,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의식을 순화시킨다. 전쟁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장난감이 진열된 놀이 공간으로 소비된다. 이들은 전쟁을 소재로 하는 각종 영상물과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사시켜 사유하곤 한다. 사람이 생략된, 다양한 관계가 배제된 전쟁박물관은 관람객의 전쟁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안목의 형성을 차단시킨다. 전쟁박물관은 호전성, 호기심, 오락, 추억 등으로 표현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 쉽게 변용된다. 민간인학살을 주제로 하는 공간들도 과거의 관행적 권위에 포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³⁰⁾

셋째, 작전과 전투의 연속적 배열이 재현 구조의 주류와 담론의 대강을 형성하고 있다. 전쟁 전반이 아니라, 전투와 전투참여자의 기록과 경험을 나열하고 현시하는 것이 전쟁박물관의 주된 구성이다. 따라서 서사와 담론은 군인, 경찰, 민간인 전투부대 등의 활동과 주장이 중심을 이룬다. 영웅은 전쟁의 재현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주제 또는 소재이다. 영웅을 소재로 한 재현은 전형적인 담론과 전투 행위의 정당성에 근거한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활용되고 있

30) 노근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할 주요 책임자는 “노근리 평화공원 야외전시관에 6·25전쟁 당시 사용했던 동종의 항공기 등의 군용장비를 전시해 전쟁의 교훈과 호국정신을 배우는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영동 노근리 평화공원 야외 전시관 개관’, 『동양일보』 2010.7.5). ‘전쟁의 교훈과 호국정신을 배우는 산 교육장’이라는 항목은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밝힌 3개의 항목들 가운데 두 번째와 일치한다.

다. 영웅은 전쟁의 부정적·파괴적 측면들을 은폐시키고, 폭력을 정당화하며, 피해의 감수와 고통의 인내를 강제한다. 대비적으로 비전투의 영역과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일상은 재현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전쟁 재연과 담론에서 민간인의 전쟁 체험과 기억은 생략·최소화·특정화되며, 다양하고 복합적 맥락과 동학이 아닌 명료하고 단순하게 재구성되어진다.

넷째, 전쟁박물관은 선과 악, 아와 타라는 이분법적 시선이 전일화한 공간이다. 전투와 죽음을 매개로 구성된 전쟁박물관은 중간지대와 다양한 시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쟁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확산시키는 주체들과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들이 전쟁의 참가자이거나 직접적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따른 영향이 무엇보다 크다. 전쟁에 대한 중립적 관점과 다양한 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쟁박물관 건립 주체들의 인식과 상충할 개연성이 많다. 전쟁 참여자, 준비자, 동원자의 관점으로 박물관의 구성과 서사를 구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박물관은 방어자, 피해자, 전투의 합법성과 정당성, 인권과 평화 등의 담론과 이미지를 통해 건립 주체들의 관점을 미화하고 있다. 반면, 전쟁 당사국에 대해서는 이와 대척적 입장에서 응시한다. 그러므로 전쟁박물관은 철저히 자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바라보고, 재구성되어 있는 전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전쟁박물관의 전시는 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쟁박물관은 ‘안보 이념의 확산과 고착화’를 지향하며, ‘반공주의’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재현의 구조와 관점 그리고 내용의 근간을 형성하고, 박물관의 존재 이유를 표방하며, 박물관을 통해 사회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를 일러준다. 주체들은 다르지만, 전쟁박물관들이 동형성 혹은 동질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관점은 뿌리가 깊고, 공고한 영역을 확보

하고 있어서 외부의 변화 요구와 문제제기에 반발한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둔감하며, 오랫동안 독점되어왔던 국가의 전쟁 기억과 시선을 고수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전쟁박물관의 관리와 운영 주체, 전시 공간의 높은 지속성·친밀성을 갖는 집단의 기대와 역할,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행화된 오랜 통치 이념의 영향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야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5. 맺음말

전쟁박물관 건립은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전쟁 기억과 기념을 공간화하려는 욕구는 계속 분출되지만, 국가의 관심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예전과 같지 않다. 한편 전쟁박물관 건립이 다른 전쟁기념물과 병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쟁 기억과 기념이 참전과 베트남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다른 전쟁기념물들의 건립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박물관은 한국전쟁 종료 9년 여 만에 국군묘지 내 전쟁기념관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때는 5·16군사쿠데타가 발발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로, ‘혁명의 기치’가 드높았다. 군사정부들에서의 전쟁박물관 건립은 신군부가 집권하기까지 일관된 기초를 유지했다. 전쟁박물관의 주제는 전사자 숭배, 군사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군의 역사,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지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 속에서 시민의 접근을 적극 유도했던 종합안보전시장과 국립묘지들의 각종 전시관 건립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민간정부 시대의 첫 발을 내딛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군부와 민간 정치세력의 타협으로 출범했던 특성이 잘 나타난다. 노태우 정부에서 출발되었던 전쟁기념관 건립이 계속되었던 것, 국가적 숭배 대상을 확

장한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 조성 계획의 입안과 착공, 안보전시관과 전적지 전시관들의 착공 또는 추진 등은 이를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전쟁박물관의 개관으로 보면, 군사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전쟁박물관 건립에 대한 착시 현상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쟁박물관의 착공과 완공이 모두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영삼 정부의 유산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집권기에 한국전쟁 50주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도 이런 현상을 발생시킨 중요 원인이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쟁박물관 건립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러므로 전쟁박물관 건립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가 과도기였고, 이후 정부들부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민간정부 시대에도 전쟁박물관 건립의 주요 주제는 한국전쟁의 주요 전투였다.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이나 유엔군 참전, 간첩선 사건 등을 주제로 하는 전쟁박물관들이 건립되면서 주제가 다변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전쟁박물관은 국가로부터 직간접으로 예산을 지원받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기관들의 검열을 받았던 만큼, 국가의 통제 하에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박물관 건립은 국가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에서 간접 지원 혹은 후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군사정부 시대에는 일부 사례를 예외로 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했다. 전쟁박물관 건립을 주관한 중앙정부는 국방부와 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박정희 정부 말기에는 교통부의 주관이 돋보이지만, 관련 장관들이 군 고위 장성으로 전역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와 인식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주관한 전쟁박물관 건립도 이루어졌으나, 몇 사례에 불과하며, 중앙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민간정부 시대의 전쟁박물관 건립 주체는 다양해졌다. 중앙정부가

아닌 군 출신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지방정부 등이 건립을 주관했다. 군 관련 단체들이 주관한 대규모 전쟁박물관들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조성되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한국전쟁 기념사업을 주관했고, 참전군인회는 호국원 조성과 긴밀했다. 민간정부 시기에는 지방정부가 주관하여 건립한 전쟁박물관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 지원과 자치단체장의 업적 그리고 관광 산업 등과 관련되어 있었다.

전쟁박물관의 장소는 주제 및 정체성과 상관적인 것으로, 집단묘지, 군사학교, 격전지, 전쟁 관련 주요 현장들이었다. 전쟁박물관을 건립했던 주요 주제들 가운데 격전지가 다수를 이룬다. 이 장소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등 제약이 많으나, 교통 여건의 개선과 여가 문화의 확산 등으로 자연스럽게 한계들을 극복해가고 있다. 전쟁박물관이 가장 많이 건립된 지역들은 경상도, 강원도, 수도권 순서였다. 대조적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건립된 전쟁박물관은 매우 적었다. 전쟁박물관이 건립된 시기별로 보면, 지역별 변화가 컸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경상도에,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대에는 강원도와 수도권에, 민간정부들에서는 경상도와 강원도에 전쟁박물관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차이 역시 전쟁박물관을 건립한 주제들과 밀접한데, 전쟁 기억에 대한 각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쟁박물관들은 전시를 통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시 공간의 특성은 사람이 배재된 재현 공간, 군사적 경험의 회고와 체험 그리고 놀이가 이루어지면서 군사적 인식이 강화되는 공간, 작전과 전투의 배열로 구성된 공간, 선과 악 또는 아와 타라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전일화 된 공간, 그리고 이념 지향적 재현 공간 등으로 정리된다.

얼마 전부터 전쟁 기억을 새롭게 재현한 공간들이 조성되고 있다.

2004년에 개장한 거창사건추모공원, 2008년에 개장한 제주4·3평화공원과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그리고 완공이 임박한 노근리역사공원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 공간들은 과거청산 작업의 공간적 결과물로, 민간인의 집단적 죽음을 추모하는 집단묘지의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억압되고 은폐되었던 전쟁의 이면을 표상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의 조성은 민간정부의 등장 및 과거청산 작업의 진행과 궤적을 같이한다.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공간들은 전쟁에 관한 국가의 오랜 공식적 입장에 균열과 반전을 가져왔으나, 재현과 담론에서는 그 자장 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관점과 서사는 건립 시기와 주관 주체들에 따라 다르지만, 전쟁에 관한 이분법적 관점을 공유한다. 그것은 과거청산이 토대한 정치·사회적 담론과 관계들에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전쟁박물관들과 많은 점에서 상반되는 관점과 담론을 표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담은 새로운 전쟁 담론이 구성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의 전쟁 담론의 수정과 편입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세기 이상 구축되어온 국가의 기억을 담은 전쟁박물관의 효과와 영향력을 재확인시켜준다.

대다수의 전쟁박물관들은 군사주의와 안보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공간은 ‘반전박물관’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평화박물관이 반전박물관으로 역할하며, 일상에서의 폭력을 극복하는 대안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건립된 공간들이 전쟁에 대한 본원적 사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화박물관의 문제의식과 지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뿌리 깊은 전쟁 기억으로 충만한 전쟁박물관들은 평화박물관의 개념과 지향으로 변모 및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전쟁박물관이 현재 및 미래의 전쟁과 갈등 그리고 폭력에서 자유로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2011년 9월 30일 접수, 2011년 11월 13일 수정, 2011년 11월 22일 확정)

참고문헌

- 강인철. 2000.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창작과 비평』. 108. 340-356.
- 공군사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1999. 『공군사관학교 50년사: 1949-1999』. 공군사관학교.
- 공군사관학교 편. 1974. 『공군사관학교 20년사: 1949-1968』.
- 국방군사연구소 편. 1992. “전쟁기념관 전시계획.” 『군사』. 24. 245-261.
- 김미정. 2002. “1950~1960년대 한국전쟁기념물.” 『한국근대미술사학』. 10. 273-308.
- 김미정. 2010. “1960~70년대 한국의 공공미술: 박정희 시대 공공기념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백영·김민환. 2009. “학살과 내전, 공간적 재현과 담론적 재현의 간극: 거창 사건추모공원의 공간 분석.”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 김숙향. 2001. “박물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기. 1995. “무기전시장 된 전쟁기념관 속사정.” 『신동아』, 431(8월호). 동아일보사. 448-461.
- 김용남. 2002. “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모색.”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남. 2003. “국내·외 군사박물관과 사회교육: 군사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군사』. 49. 299-334.
- 김용남. 2005. “호국전적지 관리체계 개선방향.” 『군사논단』. 42. 80-106.
- 김정현. 2009.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의 애국주의와 평화문제.” 『역사학연구』. 35. 177-212.
- 김행복. 1989. “전적기념물의 실태 및 그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3사교 논문집』. 28. 237-269.
- 김형곤. 2005. “한국전쟁 사진과 집합기억.” 『한국언론학보』. 49(2). 61-83.
- 김형곤. 2007. “한국전쟁의 공식 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40.

192-220.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I』. 동북아역사재단.
- 민현구. 2002. “군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모색.”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석. 2009. “동아시아의 전쟁기념관과 역사 갈등: ‘중국인민항쟁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41. 167-187.
- 박영현. 2001. “한국전쟁 전적기념물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군사』. 42. 281-313.
- 서원주. 2007.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 『박물관교육연구』. 1. 67-84.
- 안경화. 2010. “전쟁의 재구성: 기념관 속의 한국전쟁.”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1. 167-185.
- 여문환. 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국제정치』. 한국학술정보.
- 육군본부. 2000. 『육군 50년 역사사진집』.
- 육군사관학교 30년사편찬위원회. 1978. 『육군사관학교 30년사』.
- 육군사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1996.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50년사: 1946~1996』.
- 육군사관학교 60년사편찬위원회. 2006. 『(대한민국)육군사관학교 60년사: 1996~2006』.
-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2. 『육군박물관』.
- _____. 1996. 『육군박물관 도록』.
- 윤충로. 2010.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념과 기억의 정치.” 『사회와 역사』. 86. 149-179.
- 이상석. 2010a. “한국전쟁 메모리얼의 설계요소에 나타난 기념성.” 『한국조경학회지』. 38-1. 12-24.
- 이상석. 2010b.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98-108.
- 이승환. 1990. “전쟁은 기념되어야 하는가?” 『군사』. 20. 9-16.
- 이원희. 1994. “전쟁기념관은 왜 필요한가.” 『북한』. 7월호. 164-169.

- 이완범. 2005. “한국 국내의 6·25전쟁 연구 동향.” 『군사』. 55. 29-60.
- 이완범. 1994. “전쟁기념관 개관의 역사적 의의.” 『군사』. 28. 306-327.
- 이은봉. 1994. “군사재란 무엇인가.” 『군사』. 26. 357-379.
- 이은봉. 1995. “전적기념물의 보존관리 방안.” 『군사』. 31. 224-254.
- 이인범. 2002. “한국 박물관제도의 기원과 성격: 국민국가주의에서 그 너머에
로.” 『미술사논단』. 14. 35-64.
- 전경수. 2005. 『한국 박물관의 어제와 내일』. 일지사.
- 전쟁기념사업회. 1997. 『전쟁기념관 건립사』.
- 전진성. 2004. 『박물관의 탄생』. 살림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 정근식. 2010. “한국전쟁의 기억과 탈냉전.” 『창작과 비평』. 38(1). 350-368.
- 정호기. 2007. 『한국의 역사기념시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호기. 2008. “지리산권 전쟁기념물의 지역성과 전쟁담론의 변화.” 『전쟁과 재
현』. 한울.
- 정호기. 2009. “전쟁 상흔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시선의 전환과 공간의 변화: 한
국에서의 전쟁기념물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 조은정. 2010. “기록의 재생과 기억의 구조물, 한국전쟁기념물.” 『내일을 여는
역사』. 41. 187-207.
- 하세봉. 2010. “대만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 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중국근
현대사연구』. 45. 129-154.
- 한국박물관100년사편찬위원회. 2009a. 『한국박물관100년사』(본문편). 국립중앙
박물관, (사)한국박물관협회.
- 한국박물관100년사편찬위원회. 2009b. 『한국박물관100년사』(자료편). 국립중앙
박물관, (사)한국박물관협회.
- 한국박물관협회 엮음. 2008.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지도』. 민속원.
- 한범수 외. 2008. 『UN평화기념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국가보훈처.
- 한홍구. 2008. “한국의 전쟁 및 평화 기념시설과 동북아평화.” 『동북아평화벨트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한·중·일의 전쟁유적을 평화의 초석으로』. 동북아

역사재단 외.

- 한홍구. 2010. 『평화의 눈길로 돌아본 한국 현대사』. 김동소.
- 해군사관학교 50년사 편찬위원회. 1996. 『(대한민국)해군사관학교 50년사』.
-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1997. 『박물관도록』.
- 해군사관학교. 1981. 『(대한민국)해군사관학교사』.
- 金子 淳. 2001. 『博物館の政治學』. 靑弓社.
- 君塚仁彦. 2006. “일본에 있어서 전쟁기억의 표상과 과제: 전쟁박물관의 전시를 중심으로.”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세종출판사.
- Assmann, Aleida. 1999. *Erinnerungsräume*. Verlag C. H. Beck München.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역. 2003.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 Booth, W. James. 2006. *Communities of Memory on Witness, Identity, and Justice*. Cornell University Press.
- Buruma, Ian. 1994. *The Wages of Guilt: Memories of War in Germany and Japan*. The Wylie Agency LTD. 정용환 역. 2002.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한겨레신문사.
- Nora, Pierre et al. 1992. *Les Lieux mémoire: La République*. Le Monde. 김인중 외 역.
- 2010a. 『기억의 장소: 공화국』. 나남.
- _____. 1992. *Les Lieux mémoire: La Nation*. Le Monde. 김인중 외 역.
- 2010b. 『기억의 장소: 민족』. 나남.
- Relph, Edward.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td.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Sherman, Daniel J. 1995. *Objects of Memory: History and Narrative in French War Museums*.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9, No. 1.

Creation of spaces representing memories of war and their
division:

Focusing on the war museum

Ho-Gi Jung

There are numerous monuments and spaces in Korea about war. They honor those who fell in war in defense of the motherland, memorialize battles and other war-time events,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war and its history. This article considers how society's memories of war, especially the Korean War, have been embodied in spaces such as war museums. Other subjects considered are the nature of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such spaces and diversification of their characteristics. War museums bear clear evidence of the embodiment of official memories about the wars an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theme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definition and meaning of war museums and introspects o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ir them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 in their establishment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ain agent, spatial nature, and reproduction and discourse.

The first war museum in Korea was established in 1962. The themes of war museums have been more consistent than not regardless of whether a military or civil government was in power. The themes have expanded and diversified to include memorializing those killed in battle; the history of each branch of the armed forces; battlefields; participation in wars; war heroes; the Vietnam War, and more. This framework was defined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era and changed somewhat after the civilian government came into existence but remained largely intact. This demonstrates that though the type of ruling system is important, the

periodicity of war celebration also has a huge impact. Fewer war museum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governments. The role of the government has changed from direct supervision to indirect support or sponsorship. During the civilian governments, not the central government but military-related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and other such parties emerged as the main agents of establishment. War museums have been built at appropriate sites depending on their purpose and the main agents of establishment. The war museums have focused on education of the public through exhibitions, and their exhibition spaces are filled with military reproductions and discourse. As such, there is a critical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museums and for the restructuring of war museums.

Key Words : the Korean War, war museum, spatialization, memory of war, social memory.

